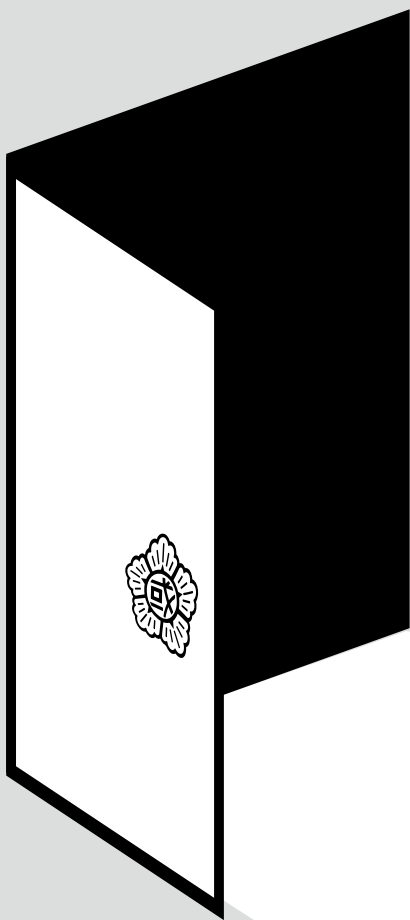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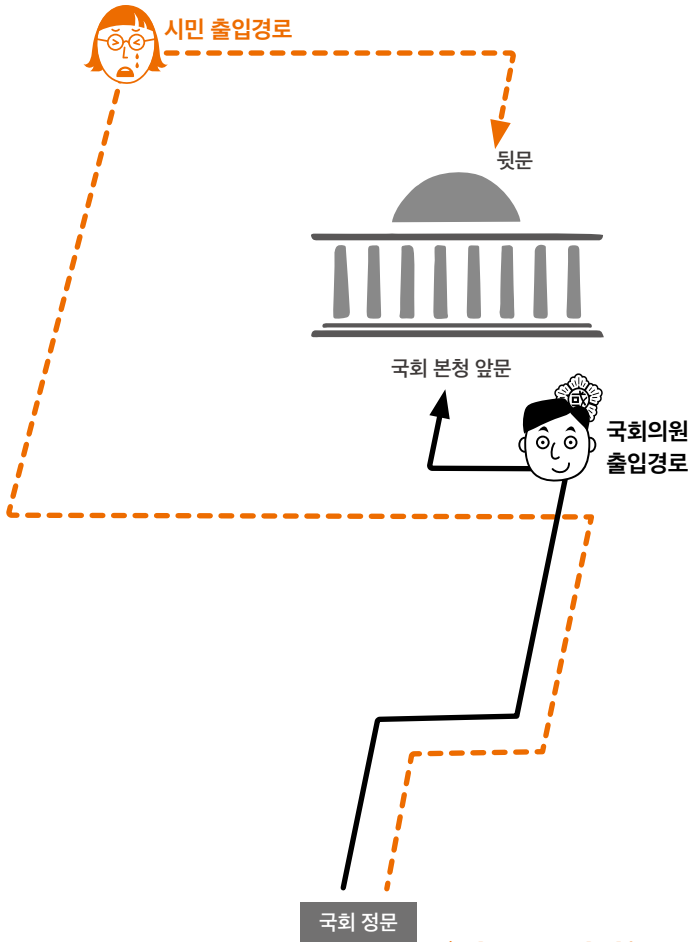


국회개혁프로젝트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목차

- 04 국회 공간을 열어라
- 06 국회 앞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 10 국회 회의 방청은 언제나
- 12 국회 도서관 이용은 누구나
- 14 국회 청원제도는 더 쉽게
- 18 의원 윤리심사는 철저히
- 20 더 좋은 국회를 위한 9가지 시민처방



‘민의를 전당’ 국회 본청
시민들은 뒷문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회 공간은 시민들에게 활짝 열려있어야 합니다

굳은 표정과 사무적인 목소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국회 방문 목적을 확인하는 용도라지만 방문자의 복장에 따라 더 까다롭게 굴기도 하니 검문 받는 기분도 듭니다. 거기다 국회 본청 정문은 국회의원들만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은 500여 미터를 돌아가 뒷문을 이용해야 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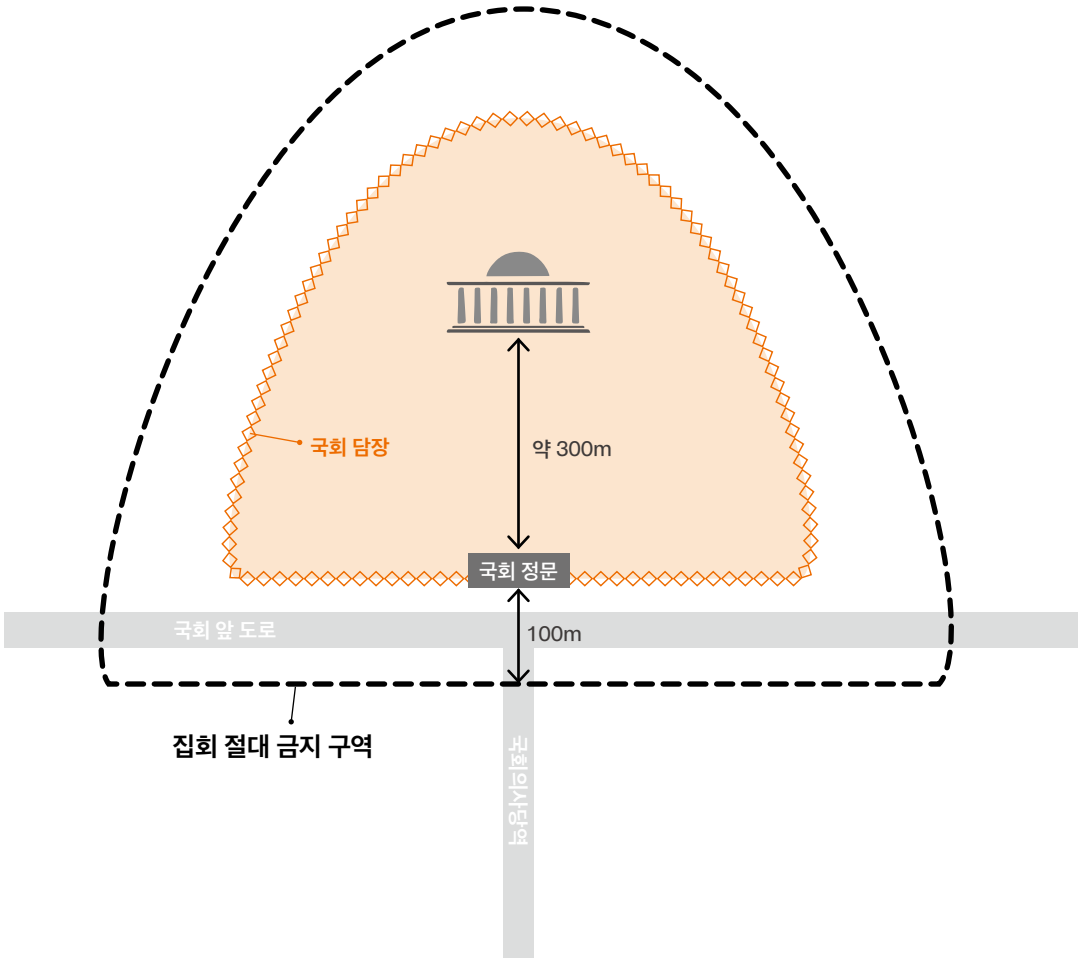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포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운영 규정

국회는 포괄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내부 규정으로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 주관 행사에만 관례적으로 개방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근거나 절차는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입법 활동 등 업무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입법 활동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국회가 건물 일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국회 공간을 원칙적으로 개방해야 합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담장까지 300미터,
담장에서 다시 100미터 안에서는
의사표현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사실!



국회는 표현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조용한 국회' VS 미국은 '시민 의견에 접근하는 국회'

우리는 국회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국회 정문 100m 안에서 집회도 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시민 의견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D.C.연방지방법원 합의부, Brigade 사건(1972)에서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인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으로 대중의 의견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과는 다르다. 따라서 의회가 ‘공원과 같은 고요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불만을 창출하고 논의를 일으킬 때 그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의 의회는
구역을 나누는 담장이 아예 없습니다.
의회 앞에서 집회 시위도 허용됩니다.
미국은 상원 계단 아래 보도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 ① 캐나다 의회
- ② 영국 의회
- ③ 미국 의회
- ④ 독일 의회

외국 의회는 늘 개방된 ‘공공의 장소’입니다

미국은 상·하원 회의장 앞 계단에서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사당 앞 잔디밭(US Capitol Ground)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20명 이하가 모이는 행사는 사전 예약만 하면 됩니다.
의사당 바로 앞에서 집회가 허용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Lederman 사건(2002)에서

“국회의사당구역 전체는 공적 광장이므로 그 구역의 사용 목적은 공적 표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상·하원 회의장과 의원실을 제외하고 국회의사당 구역 전체는 공공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주권자가 국회 회의 방청하기 참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소개 필수! 허가제 공개!

본회의는 국회의원이나 국회 2급 이상
공무원의 소개가 필수

상임위는 위원장 허가 필요,
소위원회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방청 가능

독일은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본회의
방청이 가능합니다.



선착순 입장하여 방청 가능

영국은 사전예약이나 티켓발행 없이도
선착순으로 입장하여 위원회 회의를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 회의 방청, 신고만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은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 50조, 국회법 제75조는 국회 회의의 원칙적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별도 규정으로 시민들의 회의 방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청규칙 6조는 본회의 방청 시 국회의원이거나 국회 2급 이상 공무원의 소개를 필수로 합니다. 국회의원이거나 고위공무원과 접촉하기 쉽지 않은 시민들은 방청하기 참 어렵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더 까다롭습니다.

국회법 55조는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원장의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 비공개하기 일쑤입니다. 자의적 기준으로 공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입니다.

시민들의 국회 회의 방청, 권리로서 보장 받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국회 방문과 회의 방청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거나 국회 공무원의 소개, 상임위원장의 허가 조항 등을 삭제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은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찾아볼 필요 없다?



까다로운 청소년 출입 규정

중·고등학생은 소속 학교의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 또는 도서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야 국회도서관 출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구자들만 이용하는 공간(Library's
Reading Rooms)을 별도로 두어
입법지원기구로서 최소한의 제한을
합니다. 이 공간조차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국회도서관 이용의 연령 차별, 합리적 이유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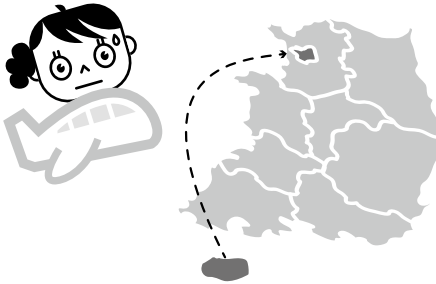
까다로운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출입 규정, 연령차별입니다

국회도서관 ‘청소년 이용안내’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학교장이나 사서교사 등의 추천을 받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국회의원이나 교육감 등의 추천을 받아야 국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와 도서를 이용하는데 연령에 따른 차별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국회도서관의 양질의 자료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이 국회 입법지원기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도서관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국내 최고의 공공 도서관입니다. 누구나 국회 도서관의 양질의 연구 자료를 읽고 학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입법지원 기능을 위해 불가피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연령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간 제한으로도 충분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김순자씨
청원안 제출하는 고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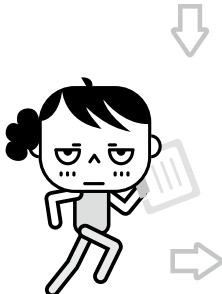
❶
제주도에서 서울로 상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찾기



❷
소개의원 찾기
308호 김의원,
507호 박의원
찾아 사정하기
(인맥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청원)



❸
소개의원의
소개 취지 작성
및 서명(도장) 받기



❹ 국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❺ 접수 완료
(작성 형식에 안맞다고
판단하면 접수 거부됨)

청원제도 이용은 쉽게, 심사는 충실히 해야 합니다

국회 청원 제도, 이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합니다.
민원이나 신고, 제안 등과 달리 인터넷 청원이 불가합니다.
청원 준비 과정에서 기본적인 입법 지원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되는 청원안이 대다수입니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청원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안 272건 중 딱 3건만 가결 처리되었습니다.
82건은 상정도 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16대 국회 때 청원 접수는 765건이지만, 17대 432건, 18대 272건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청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고, 어렵게 접수해도 논의해주지 않으니 감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용은 쉽게, 심사는 충실히 해야 합니다

온라인 청원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당 소개나 시민 서명으로도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심사기한을 엄격히 적용해 시민 의견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사하게 해야 합니다.

독일에 사는 안젤라씨
청원안 제출하는 간편한 과정

쉽고
편하구나~

독일 청원위원회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단박에 청원!
epetitionen.bundestag.de



독일에서는 온라인 전자 청원이 가능합니다

독일 의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의원 소개가 청원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청원위원회 대국민 청원 포털사이트(epetitionen.bundestag.de)에

전자 청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포럼 청원 공간에서 누구든지 청원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 당사자의 진술과 시민 참여 기회가 보장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공개 토론 절차에 회부되고, 청원인에게 진술 기회도 주어집니다.

청원위원회는 연방의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처럼

논의 한 번 안하고 임기만료 폐기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성역? 공개되지 않는 윤리심사



김XX 의원. 정기국회 회기 중에 피감기관인 해군 소속의 경기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됨. 김XX 의원에게 대한 윤리심사안은 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 처리되었음.



국토해양위원장 송XX 의원은 교섭단체 간사위원과의 협의 없이, 개회 10분 전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회의 소집을 고지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채 이미 상정처리하고 산회하였음. 송XX 의원에게 대한 징계안은 철회되었음.



안OO 의원. 태국에 위치한 모 국제연합 사무국을 방문한다는 명분 하에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여행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아 골프외유를 다녀왔으며, 마사지와 술자리 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 안OO 의원에게 대한 윤리심사안은 심사기한 만료로 폐기되었음.

자정기능이 작동해야 신뢰 받는 국회가 됩니다

국회의원 윤리 징계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 국회마다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언행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됩니다. 그러나 심사 기한을 정할 의무가 없어 장기간 방치되다가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부분입니다. 정쟁의 수단으로 징계안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징계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국회의 자정기능 회복 위해 윤리심사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원 징계 회의 비공개 조항을 개정해 국회 윤리특위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윤리특위 민간자문 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조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징계안의 심사 기한을 정하고 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좋은 국회를 위한 9가지 시민처방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

① 국회 공간 원칙적 개방

업무 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국회 앞에서도 집회를
허용해야 합니다

② 자유로운 회의 방청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방청이 신고만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③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자유로운 출입

국회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공공 도서관입니다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

④ 국회 청원 이용은 쉽게

온라인 청원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정 수 이상의 시민
서명으로도 청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⑤ 심사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제도화

청원인이 국회에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서명 청원안은
소위원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⑥ 국회 심의는 충실히

현행 규칙에 따라
90일 심사 기한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의원 윤리가 바로서는 국회

⑦ 징계심사 기한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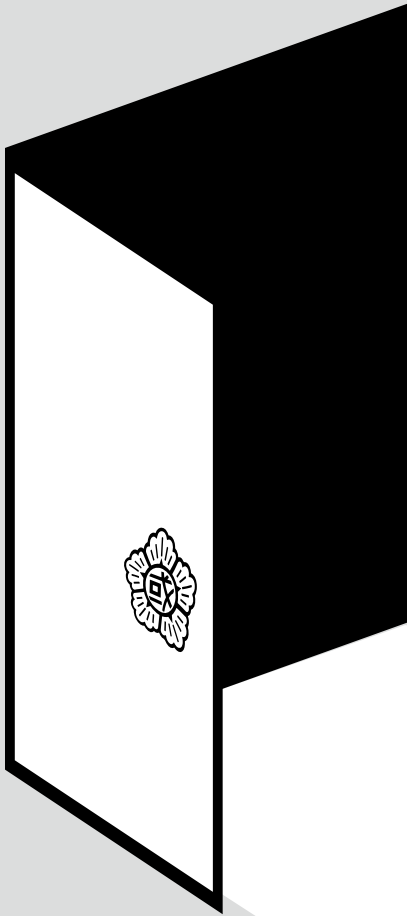
징계요구안 제출 시
심사 기한은 정하고
기한 안에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⑧ 윤리특위 회의 원칙적 공개

회의 공개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공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한 강화

국회 스스로 설치한
민간 자문기구에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은

국회 개혁을 위한 시민 행동을 기획·추진하기 위해

2013년 6월, 11개의 시민단체와 20명의 의원이 함께 결성한 캠페인 그룹으로

국회가 시민 참여와 소통, 민주주의 공간으로 거듭 나도록

국회 공간 및 회의 개방·국민 청원권 보장·의원윤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 활동

- 05/30 **기자회견** 19대 국회 개원 1년, 국회개혁 촉구 기자회견
- 06/15 **시민행동** 첫 번째 시민행동, 국회에서 놀자! 국회를 말하자!
- 07/18 **시민행동** 두 번째 시민행동, 국회에서 피크닉! 정치를 보자!
- 07/31 **공개질의**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국회 개방 관련 공개질의
- 08/19 **시민서명** '시민에게 더 열린 국회'를 위한 서명
- 09/05 **언론기고** 국회는 원래 우리 것이다! 한겨레
- 09/25 **기자회견** '국회를 시민 품으로' 참여연대 기자회견
- 09/27 **언론기고** 빗장 공공 걸어두고 국민과 소통한다고? 프레시안
- 10/01 **정책활동** '국회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및 시민서명 전달
- 10/02 **언론기고** 온라인 청원창구, 국회 청원에도 도입하자 프레시안
- 10/04 **언론기고** 유명무실 국회윤리특위, 법규 정비 필요하다 프레시안
- 11/14 **입법청원** 국회법 등 개정 입법청원안 국회 제출
- 11/23 **시민행동** 세 번째 시민행동, '국회를 시민 품으로' 거리 캠페인

2014 활동

- 10/21 **시민행동** 네번째 시민행동, 국회 소위원회 시민방청단 모집
- 11/10 **보도자료**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방청단이 간다!" 활동 공표

참여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교육학
부모회·참여연대·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내나라 운동본부·한국여
성단체연합·한국여성성전화·한국
YMCA전국연맹·환경운동연합·당
진참여연대·iCOOP소비자활동연
합회·KYC (총11개 단체)

참여의원

김관영·김광진·김기식·김상희·김
제남·남윤인순·박원석·박홍근·서
기호·서영교·송호창·유승희·유은
혜·윤관석·은수미·이학영·진선미·
최민화·홍익표·홍종학 의원실 (국
회 시민정치포럼 소속 의원, 20개
의원실)

“민주사회에서 입법부의 근본적인 기능은
시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것으로
대중의 의견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과는 다르다.

의회의 기능은 논의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공원과 같은 고요함' 보다는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을 창출하거나
사람들을 자극하여 분노하게 할 때,
그 목적을 더욱 잘 달성할 수 있다”

미국D.C.연방지방법원 합의부
Brigade 사건(1972)의 판례문 중

국회를 시민 품으로

발행일 2014년 11월 18일 발행처 열려라 국회, 통하라 정치! 프로젝트 그룹 참여단체
문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openassembly2013.tistory.com